

흑사병, 대공황, 코로나: 거시적 변화의 추세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도시 계획이 바뀌고... 벌써 여러 구체적 미시적 차원에서의 변화에 대한 관찰과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 글은 시야를 좀 더 멀리하여 '빅 트렌드'라고 할만한 것을 더듬어보고자 한다. 이런 정도 규모의 일이 벌어진 뒤 인간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쫓아갔던가? 아주 소략하나마 14세기 서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의 경우 그리고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의 경우를 비추어 같은 점과 비슷한 점을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흑사병의 경우

대한민국은 짐작컨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가장 적었던 나라들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특히 다수의 사망자를 그것도 아주 비극적인 방식으로 낳아야 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위시한 유럽인들의 경우 그 충격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유럽의 여러 지식인들은 이번 사태를 14세기 서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과 비교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물론 사망률로 보자면 14세기 흑사병 쪽이 비교도 할 수 없이 치명적이었다. 보수적인 평가를 따르더라도 전체 서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희생되었다고 하니까. 하지만 내가 말한 이들이 서슴치 않고 흑사병의 기억을 떠올리는 이유는 이번 사태에서 받은 정신적 외상이 워낙 크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발달된 현대 문명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사회적 물질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던 자기들 나라에서 '트리아제 triage' - 병자를 가벼운 환자,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는 환자, 회복의 희망이 없는 환자의 셋으로 분류하여 치료의 자원을 두 번째 집단에 집중 - 라는 황당한 관행이 되살아나고 무수히 많은 노인들과 가난한 이민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목격한 이들은 자기들 문명의 조직 및 운영 원리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직감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347년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은 몇 년 후 가라앉지만 이후에도 14세기가 끝날 때까지 몇 번에 걸쳐 재발하여 유럽 인구를 앓아갔다. 사실상 핵전쟁을 겪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유럽 사회는 이후 '중세의 가을' (후이징아)로 들어서게 되는 문명의 대전환을 겪게 되며,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인구의 격감으로 인해 살아남은 노동자와 농노들의 사회적 처우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15세기 초 플로렌스에서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공화국'이 나타나게 된다. 이윤 행위를 금지하는 카톨릭 교리에 놀려 있었던 상업 활동은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왕성하게 발달하게 되었고, 이를 철저히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체계적 방법으로서의 복식부

기가 1484년 루카 파치올리의 저서 출간으로 출현하게 된다. 또한 해골과 사람들이 어깨걸고 춤을 추는 그림인 '죽음의 춤danse macabre'에서 잘 나타나듯, 교황과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인 사회 의식 대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새로운 의식이 나타나게 된다. 요컨대, 당시의 유럽인들은 흑사병이라는 끔찍한 재앙을 요한계시록에 예견된 기존 세계의 종말로 받아들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갔던 셈이다.

짧은 지면에서 상술할 수는 없지만, 1970년대 이후 반세기 동안 나타났던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문명 또한 몇 가지의 중요한 조직 및 운영 원리를 기반에 깔고 있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제국적인 세계 질서, WTO 체제 아래에서 허용되는 생태 자연의 무한한 상품화, 산업의 지구화에 따른 가치 사슬의 출현, 지구적 거대도시들과 그 네트워크의 출현, 자산시장에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과 조직을 내맡기는 금융화, 시장 자본주의의 규칙에 철저히 복속되는 '가버너스' 민주주의 등이 그것이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구적 자본주의 문명을 떠받쳐 온 이 여섯 가지의 원리에 모두 근본적인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찐따' 소리를 들을 정도의 무능력을 노정하였고, 이는 절차적 합리성에 손발이 뭉뚱 묶인 현재의 국가 형태가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 앞에서 자산 및 금융 시장은 어떤 예측 모델도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제와 산업의 조직을 선도하는 지적인 지도력을 대폭 국가와 사회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 (벌써 대규모 재정 지출은 국제적인 '뉴노멀'이 되어 있다.)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을 도시 인구로 만들었던 거대한 도시화의 추세 또한 퇴조하거나 최소한 '실내 밀도internal density'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전 지구에 걸쳐 모세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가치 사슬은 상당 정도 '일국화'의 경향으로 돌아설 것이며, 그 기축을 이루고 있었던 중국과 미국의 산업 생산-금융 환류의 연결 고리는 이완 심지어 해체까지 내다보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의 근거를 이루는 더욱 중요한 정신적 가치의 변화도 있다. 흑사병 이후 유럽인들이 '교황에서 거지까지 죽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한 해골 바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만큼이나 근본적인 문명 원리 차원에서의 변화이다. '무한한 욕망을 무한한 생산으로 무한히 충족한다는 원리에 기반한 문명이 과연 지속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겨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미 시작된 생태 위기 - 기후 위기 이외에도 인간 서식지의 과도한 팽창으로 나타난 생물종 다양성 소실 등 여러 차원이 있다 - 의 일부라는 지적은 많은 이들이 한 바 있지만, 흥미롭게도 아주 직관적인 차원에서 그동안의 과도한 자본주의의 대량소비/대량생산 체제에 대한 성찰이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꼭 해외 여행을 가야 하는 생활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상대로 쌀을 수출하고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문명이 과연 제정신인가? 등등.

현재의 문명을 떠받치는 굼직한 조직 및 운영 원리들이 근본적인 도전에 처하게 되었

으며 그 근간을 이루는 정신적 가치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의문이 확산된다는 것. 사망자 비율의 큰 차이를 제외한다면, 14세기 흑사병과 지금의 코로나 사태의 사이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여기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

많은 이들이 현재의 상태를 1930년대의 대공황과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때와 지금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차이점이 너무나 쉽게 간과되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위기가 어떤 양태로 벌어지는지에 있어서 이후 하나의 전범의 역할을 했던 사건이었다. 먼저 자산 시장에서 거품이 터진다. 이것이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의 마비 심지어 붕괴를 가져온다. 이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면서 불황이 시작되고 이것이 다시 실업과 과잉 생산설비로 이어진다. 만성적인 대량 실업으로 인해 사회가 붕괴하고, 이것이 다시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하는 나라들이 속출한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세계 질서도 ‘현상타파’ 세력의 대두로 인해 위기에 처하고 급기야 세계대전으로 비화된다....

이러한 역사에서 (혹은 시나리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선적인 인과관계이다. 즉 자산시장에서 생겨난 불씨가 진화되지 못하고 금융 시스템, 산업, 노동시장, 사회, 정치, 국제관계 등의 장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시스템을 화마에 휩싸이게 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익숙한 대응 매뉴얼이 생겨나게 된다. 위기가 발생하면 즉시 중앙은행과 국가 재정을 동원하여 무제한의 유동성을 금융 시스템에 제공 혹은 약속할 것이며, 주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악성 부채를 떠안아 준다. 즉 자본주의의 위기의 진원지는 ‘거의 항상’ 자산 및 금융 시장이며, 이것이 산업과 사회와 정치로 확산되는 것이 위기의 양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책 또한 그 ‘중심부’인 자산시장과 금융 및 주요 기업들에 돈을 풀어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다르다. 불씨는 자산시장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괴생명체는 2020년 3월 자산 시장, 금융 시스템, 생산 기업, 노동 시장, 사회 영역, 정치 영역을 동시에 공격하였다. 주식시장은 최근 들어 안정세 심지어 예전 수준으로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을 위시한 주요 산업국가에서 노동 시장은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위기와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정형화된 위기 대응 매뉴얼로 맞설 수 있는 사태가 아니다. 유동성을 넉넉히 공급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노동 시장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별개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쉽게 정치적 위기 나아가 지정학적 위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을 넘어서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공통점도 있다. 그

것은 ‘불확실성uncertainty’이다. 역사적 통계적 데이터와 수리 모델을 동원하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확률적인 위험 감안의 가치까지 (‘VaR’) 계산이 가능한 위험을 우리는 보통 ‘리스크’라고 부른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에 데이터도 찾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이라는 전제가 성립할지조차 불확실하여 모델 구성도 불가능한 상태, 즉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한마디로 말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미래’라고 표현했던 상태를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부른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 자본주의의 커다란 위기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19세기 이래로 시장 경제의 자기조정 능력에 대한 믿음은 정치인과 관료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거의 흔들린 적이 없다. 불황이 나타난다고 해도 다 경기순환의 일시적인 국면일 뿐, 자유 무역과 금본위제라는 원칙만 고수한다면 결국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종교적인 믿음이었다. 따라서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산 시장과 국제 금본위제가 완전히 붕괴하고 이것이 견잡을 수 없는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 위기로 비화되는 사태는 완전히 새로운 전인미답의 지경이었고, 따라서 누구도 자신 있게 근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불확실성’이 바로 위기의 진정한 정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 또한 이 ‘불확실성’에 있다. 감염성은 대단히 높지만 치사율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게다가 노인과 젊은이를 차별하는 경향까지 보이는 이 괴생명체의 출현이 경제와 사회와 세계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 것인가.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에 지침이 될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 또 이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스템 중 어떤 것을 어떻게 건드릴지를 알 수 없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가정이 성립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사람들이 지금 1930년대 대공황을 떠올리는 가장 중요한 유사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국가의 새로운 역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과 기능을 갖춘 국가가 나타나게 될 개연성을 얻게 된다. 따지고 보면 불확실성이란 인류가 특히 대규모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매년 항상 겪어온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명한 최초의 장치가 바로 흉년이나 홍수 가뭄을 대비하여 다량의 곡물을 저장해 둔 신전과 거기에서 발전한 초기 국가였다. 모든 기존의 규범이 혼란에 빠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엄습하는 순간 사람들이 사회의 안녕을 보장하고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는 언제나 국가였다. 이번 사태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금융 시장이든 노동 시장이든 그 자체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으로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동성과 구매력의 배분에 있어서나 구직자들의 안녕을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에 있어서나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리쇼어링’을 통한 산업 재배치

와 기존 도시 계획의 변화 등과 같은 부분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언제 다시 새로운 물결의 감염과 맞닥뜨릴지 모르는 방역의 과제 또한 전국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보건 시스템을 국민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설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09년 세계 경제 위기 당시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였던 머빈 킹의 명언처럼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 뿐’이다.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국가 역할의 확대가 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는 세수와 지출의 운용을 둘러싼 기존의 규범에도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뉴노멀’의 출현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 지난 40년간 경제학에서 세금은 ‘경제의 실체’라 할 시장의 생명력을 ‘흡혈귀’에(제임스 갤브레이스) 해당하는 국가가 빨아먹는 ‘필요악’과 같은 것이므로 줄이면 줄일 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이 지배해왔다. 그 이전 보조금으로 주어지던 인센티브는 그래서 이제는 세금 감면으로 대체되는 일이 벌어져왔다. 지금 대한민국의 세금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세제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각종의 세금 감면 조치로 덕지덕지 기워져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앞으로도 용납될까? ‘조세 국가’를(숨페터) ‘흡혈귀’로 보고 여기에 균형 재정의 원칙을 더하여 지출 최소화를 지향하는 ‘작은 국가’가 앞으로도 받아들여질까? 이 ‘작은 국가’라는 원칙이 무너지면 균형 재정의 원칙도 또 조세 국가는 ‘흡혈귀’라는 원칙도 연쇄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의 입장에서는 세금이란 지출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을 억누른다는 원칙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미래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상기해보고 싶다. 방금 말한 국가와 재정의 확대가 ‘큰 국가’를 앞세운 1970년대 이전과 같은 대규모 굴뚝공장과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던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로의 회귀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새로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무한한 욕망을 무한한 생산으로 무한히 충족시키는 세상’에 대한 지양 止揚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옛날의 ‘큰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는 목적이 더 많은 경제 성장에 있었다면, 이제 나타날 새로운 ‘조세 국가’의 목표는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이웃 그리고 자연과 공생공락하는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옛날의 ‘큰 국가’와는 정반대의 원칙으로 세금 제도를 구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옛날의 세금 제도가 GDP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소득을 최대한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인간과 자연의 공생공락’을 해치는 행위를 억제하고 그것을 앞당기는 행동을 장려한다는 원칙으로 구성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의 국가의 변화 그리고 세금 제도의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어쩌면 재앙이 아닐 수도 있다. 이는 지구 생태계의 안녕을 보장하고 인류 의식의 고양을 가져오는, 모든 생명체가 겪게

1) [균형재정은 틀렸다: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랜덜 레이 저, 홍기빈 옮김, 책담 출판사 참조.

마련인 '진화의 시련'인지도 모른다. 아직 이 사태의 성격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것이 이 둘 중 어느 것으로 귀결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미래는 의지미래와 단순미래의 두 가지가 있다.